

[사회]

“美産 쇠고기 애들 먹여도 되나” “國産 우선 공급 시스템 갖춰야”

전남대서 FTA 따른 '학교급식 대책 토론회'

한미 FTA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산 농축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학부모 단체와 영양사,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급식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전남대 응봉홀에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위협받는 학교급식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급식 위탁운영의 경우 이윤과 단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업

체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산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재료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 경로 파악을 통한 안전성 확보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삼녀 영양사 협회 광주·전남 지회장은 “급식실에 음식재료가 도착하면 포장된 제품을 열어 육안 검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음식재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일선 영양사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 지회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음식재료를 검증하고 있다”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경로

파악과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학교급식을 훨씬 안정적으로 믿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치순 (주)보원 급식업체 대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급식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지적하지만,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급식업체 선정할 때 발벗고 나서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은 ▲학교급식 시설의 현대화와 위생관리 철저 ▲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및 협조 강화 ▲학교급식 지원센터 개설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10일 열린 학교급식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경희기자 jrwi@kwangju.co.kr

7개 사립대, 교육부 '내신 산출법' 수용

“반영률은 대학별로”... 서강대 15~20%·고려대 10% 후반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 7개 대학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실질 반영 비율 산출법을 따르기로 했다고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이 10일 밝혔다.

사립 7개대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의 내신실질 반영률 '가급적 30%' 및 단계적 상황조정 제안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실질 반영률 산출공식은 전체 총점에서 내신·수능·논술 등 각 전형요소들의 기본점수를 모두 뺀 점수 가운데 내신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의 퍼센트를 구하는

계산법이다.

사립 7개대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김 처장은 “산출법에는 합의를 했지만 반영비율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서강대는 올해 실질 반영률을 15~20%로 하겠다는 뜻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유성 처장은 올해 정시전형에서 내신실질 반영률을 10% 후반대로 하기로 내 부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연합스

허성관 광주과기원장 13일 사표 처리 공모 통해 새 원장 선임할 듯

포스코 사외이사 겸임 문제로 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한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이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오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허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공모절차를 밟아 새로운 원장을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허 원장이 지난 6일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한 뒤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2월 임기 4년의 광주과기원장에 취임한 허 원장은 과기부에서 포스코 사외이사 겸임

을 허용하지 않는데 반발, 지난달 27일 임기를 2년8개월여 남기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광주과기원 이사회는 오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 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임 원장은 2~3개월의 공모절차를 밟아 선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과기원장은 광주과기원 이사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 임하며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

철도회원 요금할인제 폐지 반발

한국철도공사가 10일부터 철도회원을 무료 '코레일 멤버십제'로 전환함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부여했던 5%의 요금할인을 폐지, 철도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등에 일방적인 회원제 폐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일선 역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납부한 철도회원 및 2004년 2만원의 가입비(소멸성)가 있는 KTX 패밀리회원제를 도입, 5%의 운임 할인과 3%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줬으나 이번에 고액 불만 해소 및 회원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무료 철도회원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회원에게는 보관금 2만원을 돌려주고 패밀리 회원에

게는 1만5천원권 전자쿠폰(유효기간 2008년)을 지급하고 있다. 유료철도회원은 200여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네티즌 박은석씨는 “5% 요금할인 등 변함이 없다고 해서 한 달 전에 KTX Family 회원으로 교체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게 말이냐 되느냐”고 흥분했고, 다른 네티즌 정우영씨는 “이런 회원제 변화로 철도회원의 특전은 없다고 본다. 철도회원카드 발급시 말쑥한 보증금 2만원 돌려달라”고 말했다.

한국 철도공사 관계자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인터넷 예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에 공지했고,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찌푸린 하늘

기압골의 영향 받아 흐린날씨가 되겠다.

광주	구름 많음	21~27℃
전남	구름 많음	21~26℃
전북	구름 많음	21~25℃
충청	구름 많음	21~26℃
강원	구름 많음	21~28℃
경상	구름 많음	21~26℃
충남	구름 많음	21~27℃
충북	구름 많음	20~27℃
경북	구름 많음	20~28℃
대구	구름 많음	20~27℃
부산	구름 많음	20~28℃
인천	구름 많음	21~27℃
서울	구름 많음	21~27℃
대전	구름 많음	21~27℃
전주	구름 많음	21~27℃
제주	구름 많음	19~25℃

7월 11일

(음 5월 27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10:38 썰물 < 04:20
 여수 밀물 < 05:52 썰물 < 00:07

▲해돋이 05:26 ▲해질 19:49 ▲달돋음 01:43 ▲달질림 16: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씨						
최저/최고	21/28	21/29	22/28	23/26	22/29	21/30

'공무원 연금법 위헌' 주장 퇴직금 반환소송 1만1천여명 중 6명만 승소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옛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2002년 퇴직금 반환소송을 냈던 1만1천여명 중 6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국가가 정한 기관에 재취업해 연금도 받게 해달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만 퇴직금을 더 주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헌 법률'로 인해 못 받은 퇴직금을 문제삼고 있지만 위헌 결정 이전의 주장과 이후에 추가한 주장은 법률적 근거와 성질,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47조)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강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연금공단 총액 400만~2천2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스

꼭내영고시학원 여름방학특강

무도공계성명회 <http://www.naydung.com> **529-0090**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7.23~24일 행사)

☎예약문의: 062-228-8000 ☎문의: 062-228-4711-2